

靑 “정전→평화체제 전환 검토”

남북 정상회담서 종전선언 추진 시사

“적대적 행위 중단 합의, 4·27 정상선언에 포함 위해 남북, 종전 당사자지만 3자 혹은 4자간 합의도 가능”

청와대는 18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궁극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종전선언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질문에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위치한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남북한이 종전 논의를 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로는 5개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4·27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은)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기 어렵다”며 “그런 표현(종전이나 적대행위 금지)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미·북·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종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점을 확정지어야 하는지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 관련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학생 투표권 보장하라

18일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본부 앞에서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한다.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해나가야 하겠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방안, 미국 방안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조건 중 하나

로 언급한 체제보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협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북한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주느냐”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금품 제공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고발

도선관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 고등학교 후배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금품을 제공받은 B씨를 18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선거사무소 선정 및 선거운동 인력 모집 등을 명목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B씨는 이를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 표시 및 제공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과열현상이 예상되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지 않은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부안·줄포상설시장

화재알림시설 공모 선정

부안군 부안을 부안상설시장과 줄포면 줄포상설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억7000만원을 지원 받아 부안상설시장과 줄포상설시장 총 233개 점포에 대해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진압 골든타임(5분)을 확보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감지센서가 24시간 열·연기·빛을 감지해 사람이 없어도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감지신호를 소방서, 점포주 등에게 신속하게 전송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화재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동향

서거석 “4.19, 촛불혁명의 뿌리”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8일 4.19 혁명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사로운 남용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혁명의 뿌리라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4.19혁명 58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억압한 부패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 예비후보는 또 “각급 학교에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열사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유광찬 “다문화 통합센터 필요”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부모를 위한 다문화교육 컨트론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제 다문화교육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넘어, 학생과 부모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센터장은 전문적이 말아야 본질적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은 시대적인 추세이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지자체 중심의 지원 센터를 교육청과 함께하는 협업체제 또는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기자

천호성, 교육정책공약 제시

천호성 전라북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전북교육정책의 방향과 공약을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에는, 교육청의 미래교육 컨트롤타워 전문기능을 강화, 교육청 주관 전문연구체계 구축을 통한 선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다각적으로 개발, 마이스터고 및 특성학교, 일 반고 직업교육 대상자들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등이 있다. /이상민 기자

850만불 수출계약 성과

전북도, 수출다변화 정책 결과 고엔원 등 업체 해외 바이어와

전라북도의 수출다변화 정책이 850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로 이어졌다.

18일 도에 따르면 ㈜홈에디션 명진 등 전북도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4개사가 터키, 몽골, 인도네시아의 유력 바이어와 850만불(한화 90억원 상당) 규모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그 동안 추진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전북 도내 주요 수출국의 통상입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동남아와 몽골, 터키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발 빠르게 대처한 전라북도의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수출계약을 체결한 ㈜홈에디션 명진(전주 소재)은 국내 2위 고무장갑 제조업체로 지난해 현지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통해 몽골 내 유통기업 순위 5위인 Nomin Home style사와 첫 미팅 이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100만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익산시 소재 ㈜코엔원은 전류나 전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서지 및 낙뢰 발생시 전자장비를 보호하는 서지보호기 생산전문업체로 2008년 설립 초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등 영업망을 늘려가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